

“고용·노동법 사업주 형사 책임 과도 처벌 중심 아닌 행정 제재 대체 필요”

광주 경제계 형벌 규제 개선 요구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사업장 확대
“기업 활동 위축·고용 불안 우려”

광주 지역 경제계가 고용·노동 법령 전반에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이 집중돼 있다며 형벌 중심 규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4일 “국내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 법령에 있는 형벌 규정이 357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233개(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으로 확인됐다”며 “기업 활동 위축을 조려하는 형사 책임 구조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고용안전, 고용차별 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의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업주 처벌 조항이 1

개 이상 포함된 법률은 전체 25개 중 19개였다.

법률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82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가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 처벌 규정이며,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형벌 적용 대상이 ‘사업주’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경총은 “경미한 행위나 분쟁 여지가 있는 사안까지 형벌로 규율하면서 사용자들이 경영과 노무 관리 전반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주들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중소기업이 처벌 위험을 줄이려면 의무 준수 수준을 넘어선 능동적인 안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핵심 활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가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광범위한 형벌 규정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시켜 근로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맞춰 고용·노동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와 국회가 형사처벌 조항을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고 대부분의 노동 관련 의무는 교육·개선명령·행정벌 등 비형사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법 집행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안전 투자의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박만(가운데)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회사인 JB금융지주를 규탄하고 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 제공>

광주은행 노조 “지주사 압박에 빚내서 배당”

10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

지역은행 공공성 악화 유발 우려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노조)은 이를 두고 “지주사의 과도한 배당 요구로 규제자본비율이 취약해 결국 고금리 자본조달까지 나서는 상황”이라며 “지역은행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 취임 이후 주력 자회사인 광주은행은 지역은행의 공공성과 지역은행의 역할보다 과도한 배당과 주가 상승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배당 여력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규제비율을 관리하는 것은 배당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배당을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광주은행이 성장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은행의 핵심 기반인 자기자본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지역은행의 설립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자금공급 여력이 줄어

드는 등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광주은행의 예대금리차자 금융권 전국 은행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단기 실적 중심 경영의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압박이 결국 지역 금융기관의 포용성과 상생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광주은행은 내년 ‘고액 리밸런싱’이라는 명목 아래 이자 수익 확대를 위한 고액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두고 “지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지역민의 힘으로 성장한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주사와 총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과도한 배당을 위한 불필요한 이자 비용 부과이자 사실상 ‘빚내서 배당’하는 행위”라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중도 퇴임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김 회장의 부당 행위는) 지배주주인 지주와 자사주 16만주를 소유한 본인의 사익을 위해 자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 행위로 판단된다”며 “금융감독원 고발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마트24, 호남권 첫 ‘프로토타입 매장’ 공개

광주첨단본점 신규 오픈

이마트24는 “광주시 광산구 첨단 시리단길에 차세대 가맹점의 표준 모델이 될 프로토타입 매장 ‘광주첨단본점’을 호남권 최초로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5일 개장하는 광주첨단본점은 향후 신규 출점 점포와 기존 점포 리뉴얼 시 기준이 되는 표준 모델이 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토타입 매장은 예비경영주의 성공을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경영주에게 경쟁력있는 점포 리뉴얼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마트24는 전국 권역별 주요 광역시 랜드마크 입지에 연내 7개 프로토타입 점포를 확대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신규 오픈 예정인 연 650개 가량 점포에 프로토타입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점

포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첨단본점을 비롯한 프로토타입 매장은 상품과 공간을 전면 재구성해 고객이 ‘트렌드’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광주첨단본점은 약 34평(113.3㎡) 규모로 라이브 플레이그라운드, 프레시라인, CVS에센셜 등 3개 공간으로 꾸려졌다.

이마트24는 광주첨단본점을 비롯해 연내 오픈 예정인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 프로토타입 매장에서는 오는 16·18일 경영주를 초청해 상품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토타입 매장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경영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규제개혁 과제 18건 성과 공개

국민 부담 완화·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4일 올 한 해 국민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국민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의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확대해달라’는 안건을 전적 수용한 결과다. 이에 공사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 문턱을 낮췄다.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 행정 편의를 대폭 높이고, 공사가 임대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공익직불금 절차를 간략화했다.

또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 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내부적으로는 투명·청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도 이어졌다.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상 업무 투명성을 높였고, 법무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낮췄다.

근로 시작지대 해소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호 공사 기획전략악시사는 “이번 성과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직원조사 최대 2년 면제

협력사 비용 부담 완화 기여

기아 등 16개 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하도급 직원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기아·대동 등 10개 기업은 중기부 장관 표창을, 두산밥캣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거래 확립에 기여한 유

공자 7명도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아는 올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활용해 3250억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 546억원을 추가 지급하며 협력사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와 6만건 이상의 하도급 거래 계약에 연동 약정을 체결해 환율 상승과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나누는 데 힘썼다.

이번 연동 우수기업 선정으로 기업들은 상생

협력법상 벌점 2점 경감,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직원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을 받게 된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원재료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연동 우수기업 혜택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적용 범위 확대와 탈법 행위 차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연동제 실효성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
지역 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p 인상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 인상은 0.25%p에 그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7500원이 추가 부담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월 1만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연간 부담액은 18만 원 수준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난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이색 방한용품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8층 루메나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발난로 워머 패드’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따라 다양한 방한용품을 선보였다. 루메나 매장에서는 가정용 욕실 온풍기인 ‘워머 프레임’, 발난로 ‘워머 패드’ 등 이색적인 방한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최근 5년 월 평균 월급 3% 오를 때 근로소득세 9% ↑

사회보험료·생계물가는 4% ↑

최근 5년간 직장인들의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실질적인 체감 임금은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월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임금에서 세금·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7%에서 2025년 14.3%로 확

대됐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같은 기간 307만 9000원에서 355만 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데 그쳐 명목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 1626원에서 2025년 20만 5138원으로 연평균 9.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도 같은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항목별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상승했다.

여기에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체감 소득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필수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대분류별로는 수도·광열비가 연평균 6.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의식

(4.4%), 교통(2.9%), 주거(1.2%) 순이었다.

한경협은 이런 구조의 원인으로 ‘과표 기준 미조정’ 문제를 지적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어도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한경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028.51	(-7.79)
↓ 코스닥	929.83	(-2.18)
↓ 금리 (국고채 3년)	3.025	(-0.016)
↑ 환율 (US D) <오후 4시 49분 기준>	1470.30	(+2.30)